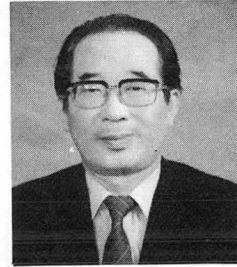


세계경제와 한국농업



김 성 훈
(중앙대 교수)

우리의 피와 살 : 쌀

남방계 작물인 쌀(稻作)이 이 땅에 들어온지 3천여 년동안 이 쌀로 인하여 7천여만명이나 되는 우리 겨레가 오늘날 지구상에 번성해 왔고, 비록 체제는 다를지언정 3개의 정부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던 우리 겨레는 쌀을 주식으로 그 삶과 경제와 문화를 경영하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삼음으로써 밀이나 감자를 주축으로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육식(肉食)위주의 식생활을 하지 않고도 두뇌 좋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민족으로 살아 올 수 있었다. 쌀은 실로 우리 한민족의 피와 살이요 뼈와 넋을 형성해 주었다. 영양학적으로는 전분(녹말)과 단백질과 지방질을 가장 알맞게 보유한 주식이 다름아닌 쌀(米)이다. 이 쌀을 재배 수확하는데 88번의 손길이 가야 한다. 그래서 쌀 “米”자가 생겼다고 할만큼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좋은 질의 쌀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

이 쌀이 지금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서양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쌀소비가 줄고, 지난 30여년 동안 강조됐던 분식체제, 그리고 가격구조의 왜곡에 따른 외곡선호 경향, 이 모두가 어울려 쌀이 남아 돌고 있

다. 흔히 과잉생산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제 지난 10년 동안 과잉생산은 88, 89두 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80년대초 미국·일본으로부터 과잉도입된 쌀이 장부상으로 매년 이월됐기 때문이다. 그때 천5백만석씩이나 과잉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아 도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 모두가 남아 돌아가는 쌀때문에 배터지게 먹고 풍년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산동네, 달동네의 많은 도시빈민—예전엔 농민이었지만 이들이 매일 끼니를 때울 근심에 잠겨 있고, 수많은 양로원과 고아원이 예산부족으로 그 흔한 쌀을 제대로 사먹지 못하고 있다. 그에못지 않게 가슴아픈 일은 전국의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중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동이 기만 기천을 헤아리고 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일찌기 말한 “눈물의 밥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했듯 경제소득 수준이 제법 높아진 우리 국민중에는 이들의 딱한 사정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시장경제원리에만 자원과 상품의 배분을 맡겨 놓을 때 한편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식량이 썩어 남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해 굶주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단체와 한국일보 등이 주

동이 되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농가의 현실 : 도시문제의 근원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농민 농촌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자.

6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농하는 인구가 연평균 50만명을 뺏고 있다. 지금도 농촌보다는 서울이 훨씬 살기가 편하고, 일자리가 많으며, 교육·문화혜택이 큰데 2천년대가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니 모두 서울로 모일 수 밖에 없다. 산업경제연구원의 「서울 빈민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들의 69%가 한 집에 두가족 이상이 세들어 살며, 대부분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도시 빈민 가운데 농도(濃度)인 호남지역으로부터 이농해온 사람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농촌 농업문제가 이제 서울(도시)로 그 무대를 옮겨 '도시문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하겠다. KDI도 농촌가구소득이 도시가구의 70%선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62조여원을 투입해서 서울시를 국제적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로 가꿔 나가겠다는 더 많은 농촌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들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또 27조원을 투자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하니 이제 너도 나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서울로 몰릴 것이다.

서울은 지금 차량과 주택,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해 사람이 숨쉬기가 곤란한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시민의 식수 역시 상수도원의 오염으로 위협수위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른 강산을 유지해 온 농촌과 농업이 황폐화되면 근본적으로 사람살기가 어려워진다. 누군가가 농업과 녹지를 지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고 장가들기도 힘들어서야 누가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살려고 할 것인가

불안한 식생활 :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요즘, 도시사람들은 식품문제로 걱정과 불안감이 극심하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영양가 높은 식품소비 패턴에서 안전한 식품을 찾는 단계로까지 변화되고 있다. 그들은 외제가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수입개방이 되자 외국산 과일이다 외국산 통조림이다 해서 난리가 아니다.

그런데 외국산 식품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생산과정은 물론 저장·가공·수송 과정에서도 병충해 농약, 성장억제 발암성 농약, 방부제, 인공 색소, 첨가물들이 무자비하게 인공처리된다고 한다. 특히 수출용에는 6주내지 7주가 걸리는 수송과정에서 썩지 않고 벌레 먹지 못하게, 그리고 짝이 나거나 너무 익어서 상하지 않도록 어떤 화학처리를 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식품안전 문제, 농촌 녹지 황폐화 문제,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 이농에 따른 도시과밀화 문제, 식량안보문제 등 모든 농촌문제는 이제 도시 소비자와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농업문제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을 도시민과 일반국민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된다.

농업·농민·농촌문제는 농민 생산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사직(社稷)과 민생(民生)의 존립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도시민의 권익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도시 소비자가 먼저 '우리농업보호'를 주장하여야 한다. 밀가루 대신 우리 농산물인 "쌀"을, 그리고 외제 과일 대신 우리나라 사과·배를, 외제 가공식품 대신 우리나라 식품을 더 먹여주어야 한다.

죽어가는 토양, 위험한 외국식품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랫첼女史가 「침묵의 봄」이

란 책을 내놓았을 때 세상은 발칵 뒤집혔었다. “봄이 왔다. 꽃은 피지 않고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봄이 왔다”로 시작되는 이 책은 농약 및 화학비료 공해로 인해 장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지구와 그위의 우리 인간이 겪을 참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현상은 농산물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른 무감시하에 외국산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을 현지에서 보관하였다가 수송할 때 엄청난 병충해 방제용 화학처리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작년 콩나물용으로 수입한 콩에서 짝이 나지 않아 소동을 빚었던 사례로써 입증된다.

미국측의 집요한 역공세로 흐지부지된 작년의 그레이프 프루츠(속칭 자몽) 발암성 농약과동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건망증이 남달리 심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버렸지만,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핵누출사건 때부터 2년간 급격히 우리나라에 수입된 어린이용 분유원료, 토마토 페이스트, 건포도 등은 외국서 수입금지됐거나 감시대상 품목이었다. 그것을 우리 기업은 값이 싸다고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수량을 도입했던 것이다. 라면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그 가정의 안녕을 지켜줄 장치는 대단히 미흡하다. 올 봄 현재 세계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농수산물 식품의 83%가 개방되어 아무나 자유로이 수입하고 있다. 내년엔 86%, 그리고 97년까지 거의 자유로이 전 농산물을 수입개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의 각종 공해물질이 식물체에 섞여 자유로이 드나들 전망이다. 정부는 농약오염의 취체 방지에 힘쓰는 이상으로 외국 농산물의 자유로운 수입 유통에 앞장서는 느낌이다. 소비자단체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7월부터는 외국산 가공식품에 ‘제조 년 월 일’ 표시의무를 삭제할 정도이다. 누구를 위한 식품행정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결국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

유기농업 : 하나의 활로

이러한 때 주부클럽을 비롯한 한살림 운동 등 소비자

단체들이 ‘유기농업’에 주목하고 건설한 농민단체들과 연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기농업이란 한마디로 좀 못생기고 병충해가 약간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수확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화학물질(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유기물질을 최대로 활용해서 농사짓는 것을 말한다. 매년 1ha당 390kg(성분량)의 화학 비료와 근 90kg의 각종 농약으로 죽어가는 땅을 다시 살리고, 그 지력에 의해 살아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자는 것이다.

올 3월말 현재 전국에는 8,500명의 등록된 「유기농업」 회원농민이 있다. 해마다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12년 전 유기농업 환경연구회(회장 유달영)가 탄생할 무렵엔 기백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자격도 엄격하여 최소 3년이상 유기농법을 실천한 농민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한다. 이들이 유기농법으로 생산해 내는 품목은 백미, 찹쌀, 참깨, 들깨, 상추, 콩나물, 쑥갓 등 39개 품목에 이른다.

그동안 마땅한 고정 판매처를 갖지 못하던 이들 유기농업 회원들이 주부클럽 등 소비자 단체와 제휴함에 따라 서울에 세곳(신세계, 새로나, 그랜드 백화점)을 비롯, 대구에 3곳, 부산과 대전에 각 한곳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한살림운동을 통해 서울등지의 주택단지와 직접 판매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제야 말로 문장 그대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 소비자는 생산농민의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양심적인 농민들이 아무리 「생명의 농법」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할지라도 그 진실과 수고를 인정하고 사주는 소비자가 없을 때 지속할 수 없겠는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소비자 단체들이 값비싼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려 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한 농민들에 의한 공해없는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외면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소득이 낮고 가난했던 시절엔 우선 배를 채우는 일이 중요했으므로 무조건 값싸고 양이 많은 것을 선호했으나, 이제 상위중진국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제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필

요한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선진화, 현대화란 것이 최소한 식단구성에 관한 한 무조건 서양화 미국화를 지향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국민 스스로가 자기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생명의 토착 농법에 충실하고 있는 유기농업생산농민과 연대하는 길뿐이다.

농어민의 미래

지난달 초, 이제까지는 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여당 국회의원 뽑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던 충청도 진천·음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충북지사 출신의 여당후보가 무소속 인사에게 참패를 당하였다.

엿그제까지 고추파동으로 시달려 온 이지역의 농민들이 여당후보에 등을 돌린 것이다. 한편 선거 결과가 발표되던 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눈을 씻고 봐도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농어민대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귀절은 단 한줄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결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10년후인 21세기의 한국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이다. 89년 현재 6백80만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농가인구(전체 인구의 약 16%)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 관련경제학자들이 애써 주장하던 적정 농가인구비율, 즉 전인구의 15%선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금년 1990년이 바로 그 적정 농가인구비율이 달성되는 해인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탈농추세는 가까운 장래에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과학기술과 자본투자지원만 체계있게 가해진다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아니, 수출하여 외국시장에 판칠 수 있는 품목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60년도 수출공업을 키우던 자세와 정책의지를 가지고 심기일전하여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에 인구가 많은 나라

이지만, 근면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농민과 온난한 온대성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자본집약적 농업을 육성하고, 국제무대에서 수출농업으로 활개치는 '공격적인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외국산보다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그리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적극 애용하고 육성하는데 행동으로 모두 참여해야 한다. 도시민도 살고, 농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살아야 한다. 농어민들이 가공해서 재미볼 수 있는 품목은 재벌기업에서 떼어내 다시 농어민에 돌려주어야 한다. 좋은 지도자, 좋은 정책만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 농어업, 농어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널려 있다. 제도부터 농어민 권익위주로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특히 한정된 투자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람교육과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장래를 밝게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개척할 풍토부터 새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위기에 정부와 농어민, 소비자와 상공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아갈 신뢰의 풍토부터 가꿔나가야 한다. 아무리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한 부분인 농어민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 주어야만 한다. 먼저 정부와 경제계는 농어업을 우리 국가유지와 국민 생존권의 최소 기본조건으로서 지키고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통, 저장, 가공, 수출분야에 농어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이익, 즉 국내가격과의 차익을 농어민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획기적인 영단을 통해 농어민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수입개방 체제하의 과잉 생산과 가격폭락 현상은 이제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같은 뼈저린 반성의 토대위에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